한국당, 김무성 등 현역 21명 인적쇄신 단행키로

"야당 본연의 임무 갖춘 인재 발굴 노력"

자유한국당 김용태(가운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진곤(왼쪽) 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와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를 포함한 현역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인적쇄신을 전격 단행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로부터 인적쇄신 명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인적쇄신 명단에는 최경환,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원유철, 이우현, 김재원, 엄용수, 김용태, 이종구, 이은재, 김정훈, 곽상도, 정종섭, 홍일표, 윤상현, 홍문종, 권성동, 홍문표, 이완영, 윤상직, 황영철, 이군현 등 현역의원이 대거 포함됐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분들은 새로운 당협위원장 공모를 할 때 공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단히 서운하겠지만 앞으로 공모에 응하셔도 이분들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강특위 위원장과 함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분열은 총선 때 이미 그렇게 됐지만 분당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김 의원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용단을 내렸고, 우리도 그 뜻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혜 위원은 "한국당은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몰락했다"며 "이번 인적쇄신은 한국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조직선임 과정과 관련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재를 등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야당 본연의 임무인 강력한 견제와 비판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특위는 이날 인적쇄신 명단 발표와 동시에 전체 253개 지역 가운데 173곳의 당협위원장을 선정하고, 교체되는 나머지 79곳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 지역구(태백·영월·정선·평창·횡성)는 보류됐다.

이진곤 위원은 염 의원 지역구 보류와 관련해 "당협위원장 배제 명분으로 만들면 오히려 검찰에 무리한 수사 의지를 도와주는 게 되는 것"이라며 "특별히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차기 당 지도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배제된 현역의원 21명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줬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을 불러 면접 좀 보자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묻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 최대한 예우하는 차원에서 면접은 안 했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당 물갈이 대상 의원들 반응 제각각

"기꺼이 받아들일 것" vs "소명기회 줘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구제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며 대응을 시사하는 의원들도 있다.

친박계였던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의 분열, 두 분 대통령 구속, 대선 참패에 저도 책임이 있다"며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으로서 이런 식의 3중 처벌로라도 책임지라면 기꺼이 책임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면 따르겠다"고 했다.

범친박계였던 원유철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을 살려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간절한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당파이자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용태 사무총장도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비대위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원들도 있다.

복당파이자 6.13 지방선거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홍문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을 정리할 때는 몇가지 수긍하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충청도는 험지인데 6.13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도의원 등을 다수 당선시켰고, 사무총장했던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복당파도 모두가 들어간 게 아니다"라며 "재심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대위의 인적쇄신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심상정 "이달 중 정개특위안 마련돼야…주3회 회의 열 것"

"민심 그대로 국회 만들어 변화 물꼬 트는데 앞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여야가 선거제 개편 합의문을 발표한것과 관련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안이 마련돼야 한다. (내년) 1월 중에는 나온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정치협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개특위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다음주부터 주3일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번 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는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그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간사들간 몇 차례 회동을 거치며 입장을 조율해온 바 있다"며 "특위 원장으로서 라스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비례대표 비율 ▲지역구 유형(소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 ▲의원정수 확대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심 의원은 "이제는 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을 어떻게 할지, 지역구를 소선구로 할 것인지, 중대선거구로 할 것인지, 정수 확대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몇 퍼센트(%) 보다는 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구체적으로 몇명을, 어떻게 (늘릴지)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 열린 자세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안을 지지하겠다고 한 것에는 "사실상 선거제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고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쟁점을 조율하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투쟁으로 소기 성과 거둬

소수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 거대 양당 타협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한 야3당 농성 해단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대표의 단식은 지난 6일 '당리당략', '무리수'라는 비판과 함께 시작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정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눈 감아왔던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움직이게 했다.

소수정당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쓰러지는 장면은 거대 양당 지도부에게 압박과 부담이 됐다. 사실상 의석수 손실이 불가피한 협상을 강요받게 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두 야당 대표가 쓰러질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물론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의 '반(反)기득권 연대'와도 대치해야 했다. 여당이자 원내 제1당으로서 갈등 조정력과 정치력 부재를 탓하는 지적이 불거지면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컸다.

아울러 두 야당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 되면서 중재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불러 단식 중단 방안을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해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40분간 두 야당 대표의 단식 등 현 정국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 보완을 지지한다고 화답하자 문 의장은 두 야당 대표에게 이를 전하면서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간 3자 대화 창구가 가동되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문과 여야간 합의 도출에 일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문 대통령과 회동을 요청한 것에 대해 "문 의장이 두 야당대표가 병원으로 실려 가는 것은 정당간 신뢰가 깨져 내년 국회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15일 야3당 농성 해단식에 참석해 "오늘 합의에는 문 의장의 역할이 아주 컸다. "문 의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 국회의 뜻을 전했다"며 "문 의장이 대통령의 뜻을 원내대표들에게 전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물론 거대 양당 지도부의 타협도 이뤄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취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당내 상황도 복잡한 가운데 두분 단식을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통큰 합의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